

2021년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최근 이슈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원화/가명처리 활용부분을 동일하게 수용

개인정보 보호법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 격상
- ✓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정보 통신망법



- ✓ 개인정보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통합 및 특례를 신설하여 이관

신용정보 보호법



-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 근거 마련
- ✓ 가명정보 활용 근거 및 행위규칙 제정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최근 이슈

🔒 개인 정보 유출 시 피해유형

신상털기

- **개인 사생활 침해 발생**
 - 사귀던 애인이 SNS에 글을 올려 개인정보를 침해함에 따라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스토키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명예훼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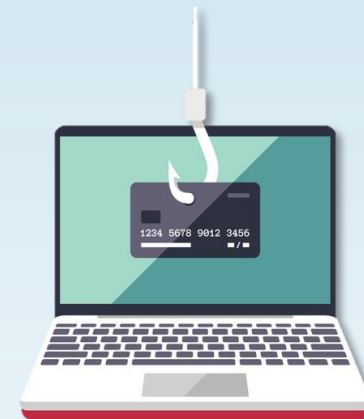


명의로용

- **경제적 손실**
 - 계좌번호, 카드번호 노출로 원치 않는 결제가 실행되어 경제적 손실 발생
- **정신적 피해**
 - 개인정보 침해로 육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보이스 피싱 또는 명의도용

- **경제적 손실**
 - 계좌번호, 카드번호 노출로 원치 않는 결제가 실행되어 경제적 손실 발생





최근 이슈

🔒 4차 개인정보 보호 계획

✓ 비전

-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화하여 안전한 디지털 신뢰사회 구현

✓ 목표

-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혁신 및 정보주체 권익 증진
- 자율과 협력 기반의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 추진 전략 및 과제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확대
-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 강화
-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익 보호
-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개인정보 리더십 확보

-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지원 강화
- 국제 개인정보 거버넌스 선도



최근 이슈

🔒 4차 개인정보 보호 계획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 환경 구축]

항목	내용
과제 5.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 활성화	①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 확대 자율규제 제도 개선 ②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 내실화 ③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 영향평가제도 개선
과제 6.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①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실효성 제고 ②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조례 정비 및 지원 ③ 개인정보 보호 법제 선진화 연구
과제 7.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고도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①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체계 개선 ② 분야별 맞춤형 관리실태 점검체계 정비 ③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기업 대상 관리·감독 강화
과제 8.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지원 및 산업 경쟁력 제고 ②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17면)



최근 이슈

🔒 개인정보 침해와 법 개정에 따른 궁금증

Q 가명정보의 신설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변화가 있을까요?

Q 법 개정으로 침해가 줄어들 수 있나요?

Q 수집이용·제공의 확대로 활용 제고와 침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최신동향

제1조 개인정보 개념과 유사 용어 정의

제2조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사 용어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GDPR]

✓ 개념

-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의 약어로, EU내 개인 정보(personal data)의 처리와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EU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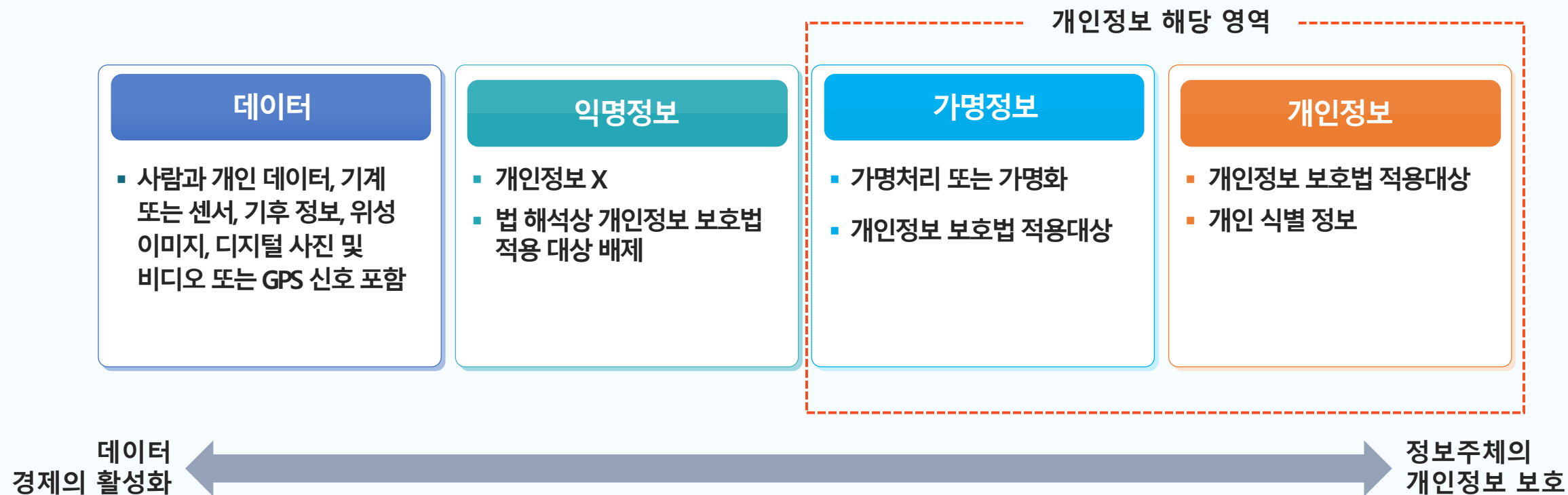
✓ 제정 목적

- 자연인에 관한 기본권과 자유(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보호(제1조제2항)
- EU 내에서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제1조제3항) 보장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사 용어 정의

🔒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관계 구조도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사 용어 정의

🔒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 가명정보는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 시간·비용·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적용제외)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사 용어 정의

가명정보

✓ 가명정보 개념 명시 (제2조제1호 개정)

- 가명정보는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 **가명처리**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 과학적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단, 개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

추가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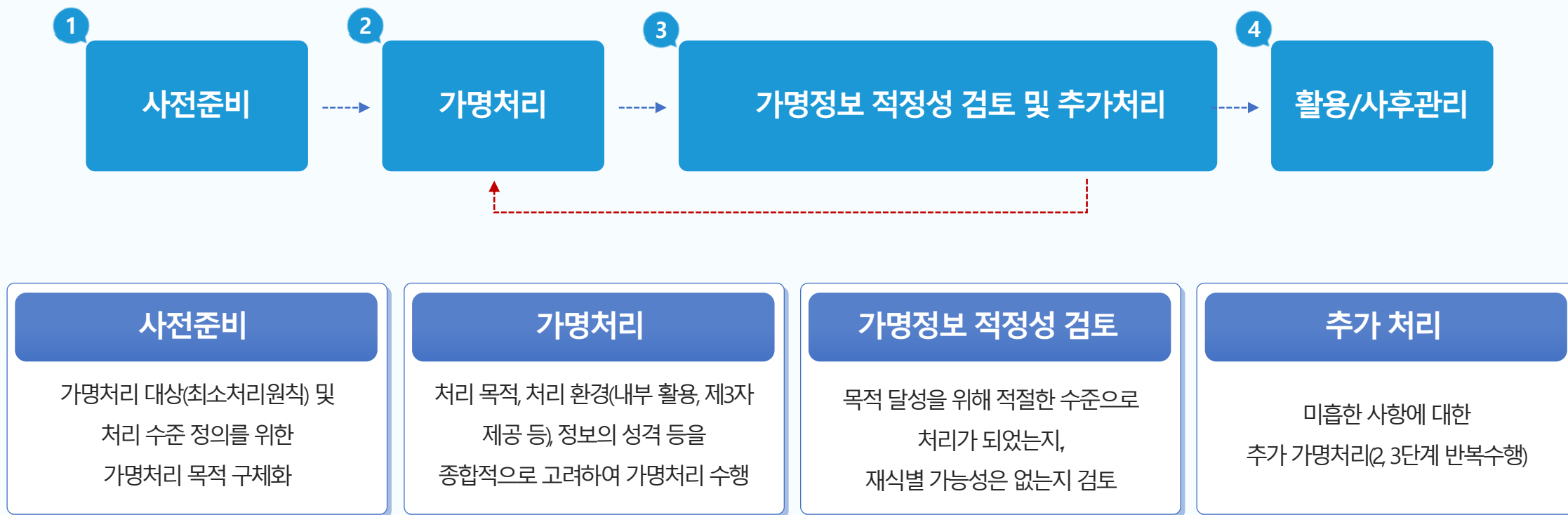
✓ 추가정보를 '**가명처리 비밀(pseudonymization secret)**'로 한정하여 해석 가능

- **가명처리비밀** : 가명으로부터 원래의 식별자를 복원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가명처리 함수 관련 정보일체로, 암호화 키, 매핑표(mapping table) 등 일정한 변수(parameter)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변환하는 과정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암호화 키나 매핑표 등이 이에 해당
- 추가정보의 '정보' : 정보주체의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의미하는데, 이를 보조정보(auxiliary information), 외부지식(external knowledge), 배경지식(background knowledge)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를 수 있으나, 제3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형의 정보를 통칭하여 '보조정보'라 정의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사 용어 정의

가명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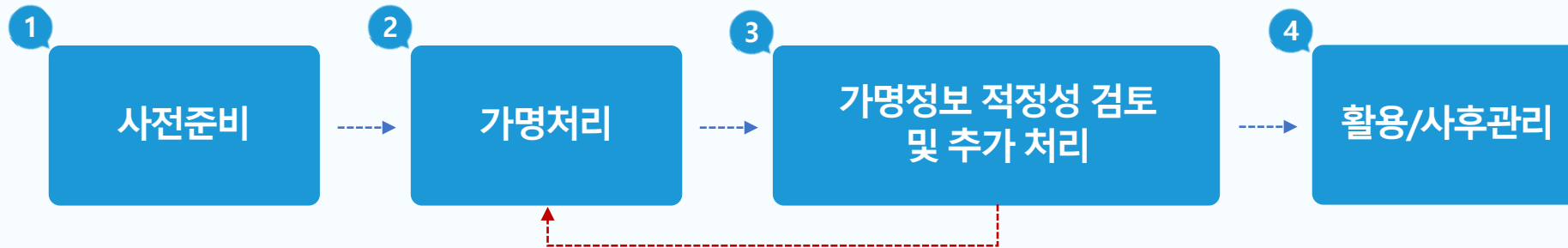


(출처: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이슈페이퍼 01, "가명정보의 개념 및 가명처리에 관하여" 15면 참조)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사 용어 정의

신용정보법(가명처리)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 및 절차별 내용 설명



사전준비

- 가명정보 **활용 목적 구체화**, 접근권한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목적에 맞는 **필요최소한도의 원본 정보집합물 추출**

가명처리

- 정보 **이용 목적·환경·주체**, 정보 특성,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수준 및 보유기간을 결정**하고 **가명처리**

※**가명처리**: 식별자(성명, 전화번호 등)는 **삭제** 또는 **대체**(암호화 등)하고, 그 외 정보(주소, 자산 등)는 결정된 가명처리 수준에 맞춰 **일반화, 범주화 등 비식별조치 실시**

가명정보 적정성 검토 및 추가 처리

- 필요시** 가명처리 수준이 적절히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가명처리**를 수행

활용/사후관리

- 가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이용·제공·결합**한 후 **목적달성(보존기간 도래)시 가명정보를 파기**

※**보존기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안 등에서 가명정보의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보존기간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재설정토록 규정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사 용어 정의

🔒 익명정보

- ✓ 시간·비용·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개정법2020.08.05시행, 제58조의2 신설)
 - 종전에는 법 해석으로 적용을 배제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명문화하고자 함
 - EU의 GDPR은 전문 제26항에서 익명정보의 GDPR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익명처리 여부는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 싱글 아웃(Single out) 여부 모두 평가

(출처: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https://www.dataprotection.ie/docs/Anonymisation-and-pseudonymisation/1594.htm>.)

[EU의 GDPR 전문 제 26항]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적용된다. 가명처리를 거친 개인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으로 **개인에 연계될 수 있는 정보**로서,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개인이 식별 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선별(singling out) 등 그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컨트롤러 또는 제3자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수단이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의 모든 객관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처리 시점에 가용한 기술 및 기술 발전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익명정보, 즉 식별되었거나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련되지 않은 정보 또는 정보주체가 식별 가능하지 않거나 더 이상 식별 가능하지 않은 방식으로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규정은 통계 목적 또는 연구목적 등을 위한 익명정보의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사 용어 정의

🔒 익명정보 평가기준(EU GDPR)

✓ 연결 가능성(Linkability)

- 동일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 그룹(동일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적어도 두 개의 개인기록부를 연결시킬 가능성
- 만일 어떤 공격자가 동일한 개인 그룹에 대해 두 개의 개인기록부가 지정되었음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나 이 그룹의 개인을 식별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면(예 : 상관분석을 통해), 그와 같은 기법은 '식별' 공격에 대해서는 내성을 가지지만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성을 갖지 않음

✓ 추론 가능성(Inference)

- 한 속성의 값을 유의한 확률을 근거로 다른 속성의 집합의 값으로부터 유추할 가능성

✓ 싱글 아웃(Single out)

- 데이터세트에서 개인이 식별되는 개인기록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해 낼 가능성(식별가능성)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가 가장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큰 수단으로 재식별처리를 시도할 때 이를 막는 안전한 솔루션은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 싱글 아웃(Single out)** 세 가지 위험을 제거한 솔루션임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사 용어 정의

🔒 익명정보 평가기준(EU GDPR)

- ✓ 익명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더 이상 자연인의 식별에 사용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여야 하며, 모든 예상되는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아야 함

※ 제3자 : 해당 정보주체와 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함
(예 :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해당 정보주체가 아닌 또 다른 정보주체 등)

- 익명처리에는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음. 익명처리 기법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해당 기법에 의해 '익명 처리된' 데이터의 위험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위험의 심각성(severity)과 발생 가능성(likelihood)을 평가**해야 함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사 용어 정의

[참고] 신용정보법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예시

예시 1. 원본정보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보험가입건수
신사임당	010-1234-5678	여	1974.10.1	3
권율	02-2345-6789	남	1990.3.26	
유관순	010-3456-4321	여	1974.10.1	
이순신	010-4567-9876	남	1990.3.26	
선덕여왕	010-5678-9012	여	1974.10.1	
...

예시 2. 가명 처리된 정보

ID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보험가입건수
9A00F1155584BA5	신사임당	010-1234-5678	여	1974	3
C2E63789035D70	권율	02-2345-6789	남	1990	2
DACE2CCC9F45938	유관순	010-3456-4321	여	1974	
27B339D75FF1DCE	이순신	010-4567-9876	남	1990	
6CE926B166980F9C	선덕여왕	010-5678-9012	여	1974	

예시 3. 익명 처리된 정보

성명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보험가입건수
권율	02-2345-6789	D	20대	2
이순신	010-4567-9876	D	20대	2
류성룡	010-7890-1234	D	20대	2
안중근	010-6700-0123	C	30대	3
이황	010-8901-2345	C	30대	5
...

※ 동 내용은 하나의 예시로 실제 가명처리, 익명처리 수준은 정보는 처리 목적, 이용 환경, 정보특성, 위험도 등에 따라 상이함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원화/가명처리 활용부분을 동일하게 수용

개인정보
보호법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 격상
- ✓ 가명정보 도입 등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부과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정보
통신망법



- ✓ 개인정보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통합 및 특례를 신설하여 이관

신용정보
보호법



- ✓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 근거 마련
- ✓ 가명정보 활용 근거 및 행위규칙 제정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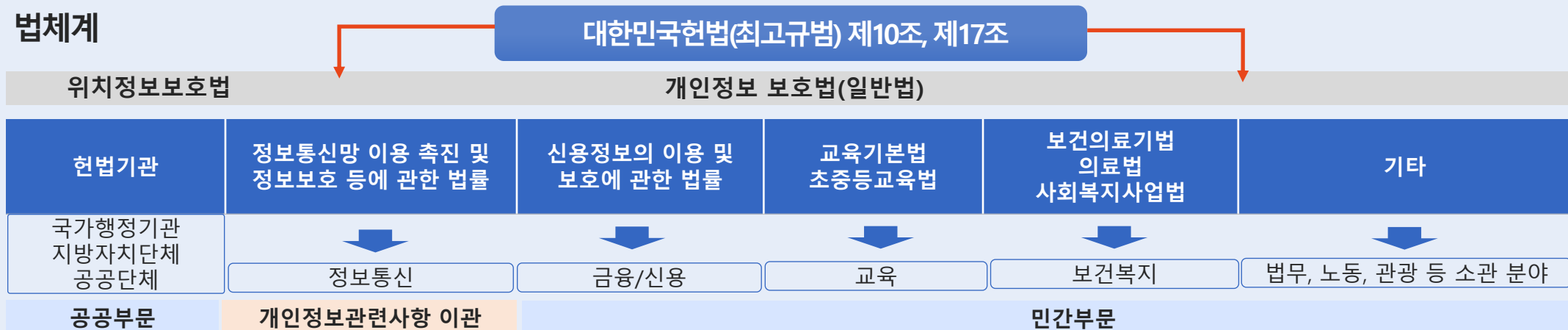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법의 집행 체계(법 개정사항 반영)와 법체계

✓ 집행체계

- 대통령 - 헌법기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기타부처	개인정보분쟁조정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 기타 민간 분야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 집행(기본계획 수립 등) ▪ 주요사항 심의의결 ▪ 기본계획 수립 ▪ 정책, 제도 및 법령 개선, 해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관련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신용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 교육, 법무, 노동 등 소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구제

✓ 법체계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일원화 체계 구축(예외 : 신용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제]

- ✓ 기술적 보호조치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있음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심으로 개인정보컨트롤 타워 일원화(단,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검사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일의적 감독, 검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협업 필요)

항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업자 등이 개인신용 정보 수집/활용/제공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 개인정보 수집 시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방송사업자 수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정보집중기관(5개) 신용정보업자(33개) 기타 신용정보처리 개인정보취급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사업자, 근로자 비영리단체(협회, 동창회 등) 공공 기관 등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 목적 등 고지 및 사전동의 획득 후 수집 주민번호 수집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 시 목적 명확 합리적/공리적 수집 신용정보 무관 정보 수집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 목적 등 고지 및 사전동의 획득 후 수집 주민번호 수집 제한
이용/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시 동의 획득 의무 상거래 관계설정/유지여부 판단 외 제공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금지

(출처: KISA 자료 변형)

개인 정보 관련 규정을 특례로 이관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 개인정보보호계획 및 위원회 제도 개선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변경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차(최대 2년) 해소를 위하여 수립 시기 조정
 - 기본계획 수립 시기 :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 전년도 6월 30일 까지
 - 시행계획 수립 시기 : 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 조정

✓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원회 운영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
- 기존 10명 이내 → 20명 이내로 위원 규모 확대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시·도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협의회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시·도 개인정보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출처: 행정안전부, 데이터3법 시행령 토론회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주요내용, 8면)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령 일원화

“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는 사항 중 시행령에 반영이 필요한 규정 이관 ”

[참고]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보호법 이관 사항

흡수·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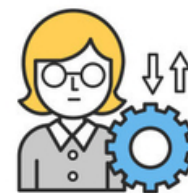
- 동의 받는 방법
- 민감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영업의 양도·양수
-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인증
- 열람·정정·삭제 요구
- 손해배상
- 법정손해배상
- 금지행위
- 고발

기존 규정 개정



- 개인정보 제공
- 목적 외 이용제한
- 개인정보 처리 방침
- 법정대리인 권리 행사
- 비밀 유지

특례 이관



- 수집·이용
- 유출통지 및 신고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동의 철회
- 이용내역 통지
- 손해배상 보험
-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차단
- 국내 대리인
- 국외 이전
- 상호주의
- 과징금
- 방송사업자 준용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률(개정)의 체계

[개인정보 보호법 - 본문 10장 114개 조문, 부칙]

항목	세부 내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정의, 개인정보보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실태점검, 자율규제촉진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28조의 2~제28조의 7) ▪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기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등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유출통지제도 등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 동의 등/유출 등의 통지·신고/보호조치/ 파기/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분쟁조정의 신청방법·절차, 효력,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소송 대상,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
제9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소송 대상,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적용제외, 금지행위, 침해사실신고, 시정조치 등
제10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 몰수 추징, 과태료 및 양벌 규정 등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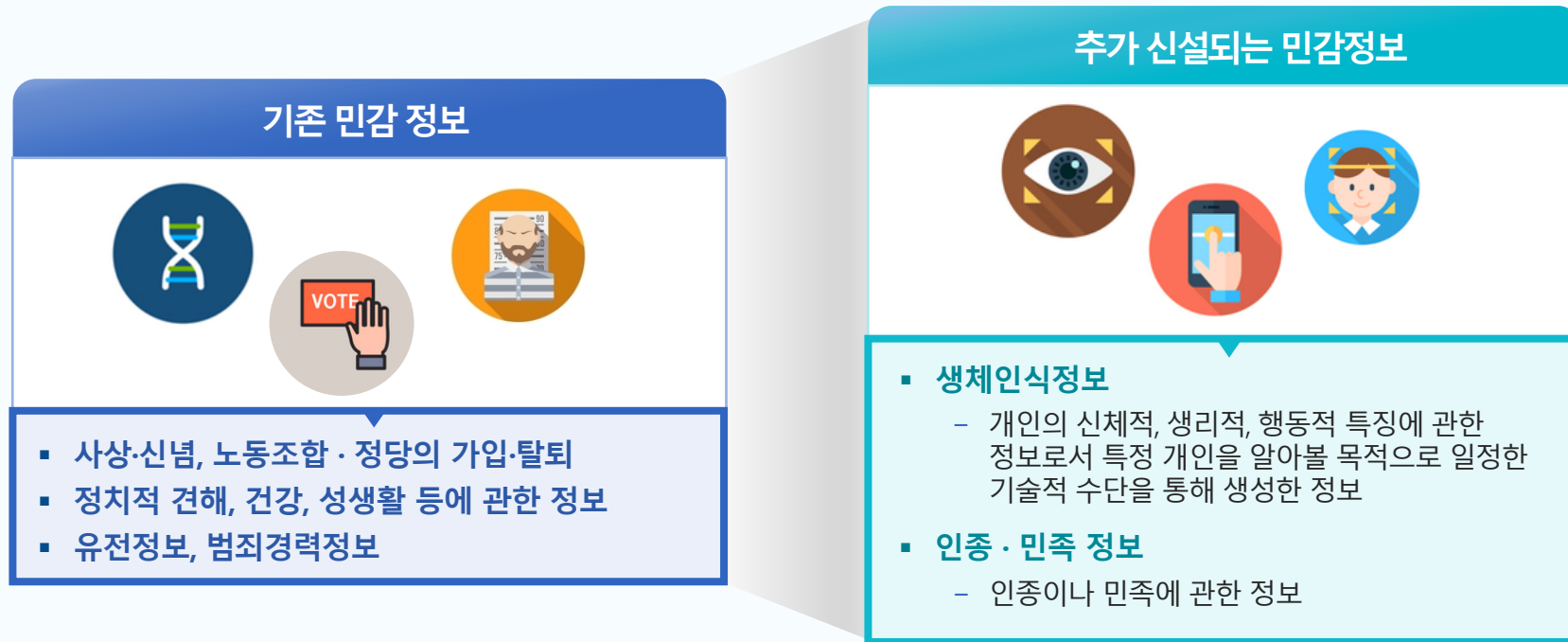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항목	내용
개인정보 판단기준 명확화 (제2조제1호 개정, 제58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해석 상 법 적용을 배제하던 익명정보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제도화 (제2조제1호 개정, 제28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동의없이 처리 허용
수집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 내에서 활용 확대(제15조, 제17조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가능
정보집합물 간 결합 근거 마련 (제28조의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간 데이터는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후,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제28조의4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벌칙 등 규정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효율화 (제7조 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보호위로 일원화
정보통신망법상 특례 반영 (제6장 신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 규정을 삭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에만 있는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 민감정보 범위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 개인정보 처리 범위 확대 - 목적 중심적 해석에서 목적 합치적 해석으로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처리 범위 확대 – 목적 합치적 처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안 이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제10조(개인정보 처리위탁의 통지)	현행 시행령 제28조 적용
제11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현행 시행령 제29조 적용
제12조(동의획득방법)	현행 시행령 제17조 적용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방법 등)	현행 시행령 제31조 적용
제14조의 2(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특례 반영(안 제48조의 3)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일반조항 반영(안 제30조 제2항)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 유효기간제	특례 반영(안 제48조의 4)
제16조의 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현행 시행령 제14조 적용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특례 반영(안 제48조의 5)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3법 시행령 토론회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주요내용, 6면)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안 이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제17조의 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특례 반영(안 제48조의 2)
제18조의 2(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특례 반영(안 제48조의 6)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특례 반영(안 제48조의 8)
제54조의 2(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시행령 제34조의 2~제 34조의 8 적용
제67조(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특례 반영(안 제48조의 9)
제69조의 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69조의 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특례 반영(안 제48조의 10~안 제48조의 12)
제70조의 2(고유식별정의 처리)	일반조항 반영(안 제62조의 2 제2호)
제71조(규제의 재검토)	일반조항 반영(안 제62조의 3 제1항, 제2항)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일반조항 반영(안 [별표 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3법 시행령 토론회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주요내용, 7면)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1)-법개정

신용정보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 국회 4차산업특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등의 근거를 마련
- 가명정보 재식별 등 안전한 처리 관리·감독을 위한 제재 강화(징벌적 과징금, 형사처벌 등)

※ 징벌적 과징금 :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3%(매출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 시 최대 200억원)유사중복 규정 정비

※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과태료 5천), 추가정보 분리보관 및 엄격한 보안대책 마련·시행(과태료 3천) 의무화

✓ 개인정보에 관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유사·중복 규정 정비

※ 제16조(수집·조사 처리의 제한) 등 13개 조항

✓ 금융분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권리 도입

- 정보활용 동의제도의 개선(단순화·시각화) 및 정보활용 등급제 도입
- 정보주체가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결과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요구·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리 도입
-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게 본인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을 요구할 권리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 개인정보 침해와 처벌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벌칙과 민사책임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

형사제재

징역형 또는 벌금, 몰수/추징

행정제재

과징금, 과태료

민사제재

법적·징벌적 손해배상

- ✓ 그 외에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 포함)과 단체소송 규정
- ✓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68조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 개인정보 침해와 처벌

과태료
또는 과징금

실태점검결과, 법률위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행정제재**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시,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
-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부여

법정/징벌적
손해배상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
(법정손배: 300만원 이하, 징벌적손배: 손해액 3배 이내)

형사처벌

-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주요 내용에 대한 법
-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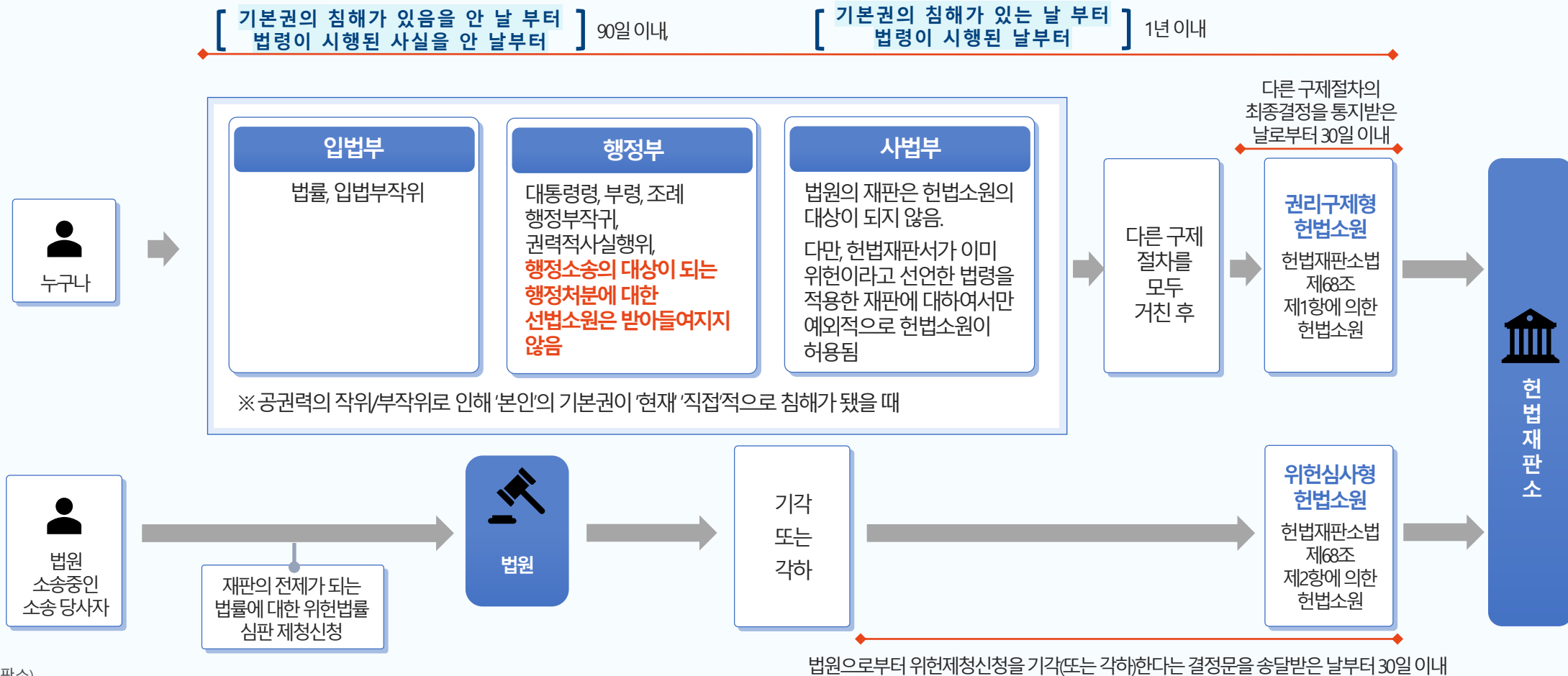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의
정지/금지를 위한 단체소송은
논외로 함

※공공기관 내부 규정에 의한
처벌은 논외로 함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헌법소원 청구방법



(출처: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헌재 결정례 1

[개인정보처리자 vs. 개인정보취급자]

✓ 사건 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한 기소유예처분 사건(헌재 2018. 4. 26. 2017헌마711, 공보 제259호, 781 [인용(취소)])

- ① 청구인은 2010. 12. 22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공단에서 감사팀 직원으로 근무함
- ② 청구인은 2013. 2. 10. 위 공단 소속 직원들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공단 산하 8개 사업소 전 직원들 약 300명에게 자신의 범죄 경력을 자진신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 전자우편에는 비위 유형, 처분 내용, 처분 기관, 처분 일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자진신고한 직원의 경우 비밀을 보장하고 정상참작을 해 주겠으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대면조사하여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③ 이에 직원 15명이 자신의 범죄경력 21건을 자진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집하여 '사법기관 처분내용 자료수집 현황'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만들어 직장 내 청렴교육 시간에 활용함. 이 자료에는 직원들의 실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범죄유형과 건수만 포함되었으며, 강의 시간에도 소속이나 실명 등은 밝히지 아니하였음
- ④ 인천○○공단 소속 직원인 임○기는 청구인이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8.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17. 5. 25. 피청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 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6.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재 결정례 1

[개인정보처리자 vs. 개인정보취급자]

✓ 사건 개요

-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항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본문(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근거조항'이라 한다)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근거조항이 청구인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함

✓ 판시사항

- 청구인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

청구인에게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인천○○공단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음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재 결정례 1

[개인정보처리자 vs. 개인정보취급자]

✓ 판단 근거

- 청구인이 이 사건 근거조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규정한 다음(제3조),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제15조 내지 제22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 내지 제28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 내지 제34조의2)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위 법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고 개념 정의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6호 나목,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은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함
- 청구인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제28조 제1항 참조)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음
 - 위 인정사실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개념 정의 및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천○○공단이고, 청구인은 인천○○공단의 감사팀 소속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거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결국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거조항 위반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자의적인 처분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재 결정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사건, 2019. 9. 26.2017헌마1209

- 전기통신사업자등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해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 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 확인 사건, 2019. 11. 28. 2017헌마399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본문, 제3항) 및 법무부장관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등록정보를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과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와 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행위(「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7항 제3호)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헌재 결정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2019. 11. 28, 2017헌마1163

-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규정과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해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등록면제신청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삭제 거부행위 위헌확인사건, 2019. 12. 31, 2019헌마1388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결과 보도자료 삭제를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는 기재만 있을 뿐 행정예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있고, 민원회신의 주체 역시 행정기관의 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본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전화통화로 위와 같이 답변한 것만으로는 피청구인의 명시적·확정적 거부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 개인정보보호위, 2020상반기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발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한 민원서식 233건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일 올 상반기 211개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민원 서식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려던 법령이 올 상반기에만 104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104개 법령에서 침해 요인이 발견돼 개선을 권고했다. 개선권고 사항은 총 263개다. 이 중 민원서식에 대한 권고가 89%(23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근거 없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려던 38건에 대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를 모두 기재(62건)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대표자의 개인정보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적도록 해 둔 경우(68건)도 있었다. 그 외 성별, 국적, 직업 등 민원처리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수집하는 개인정보(65건)를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2020.7.20)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 개요

-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휴대전화 부가서비스에 동의 없이 가입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건

- ① 신청인은 당시 지방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신청인이 소속된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신청인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공개되어 있었음
- ② 신청인은 가입신청 시 작성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필수동의로 표기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와 선택동의로 표기된 '설문조사(제3자의뢰 설문조사 포함)재화서비스 홍보 및 권유를 위한 동의' 등에 동의함
- ③ 신청인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내용 중에는 피신청인(이동통신사)이 비즈링 서비스를 A서비스("수탁사")에 위탁처리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④ 피신청인은 2017년 4월 수탁사와 '통신기반광고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사는 비즈링 상품 영업을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신청인의 성명, 직업, 나이, 경력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인 연락처를 확인하였고 전화를 걸어 비즈링 광고 영업을 한 후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인 동의 없이 비즈링 서비스에 가입처리함

✓ 위원회 결정

- 수탁사가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근거 없이 신청인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 영업에 이용한 것은 신청인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제 최신동향(2)-판례/결정례 등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사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 개요

- 피고발인의 연락처 확인을 위하여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① 신청인(피신청인이 고발한 자의 배우자) 신청인의 배우자는 피신청인의 민원처리 부서를 방문하여 사망한 친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하였으나 민원처리 부서에서는 인감사무편람 지침에 따라 발급을 거부하고 신청인의 배우자를 A경찰서에 고발함
- ② 인감증명 사무편람에서는 사망자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 발급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발급신청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
- ③ 피신청인(지방자치단체) 2019. 6. XX. A경찰서로부터 피고발인의 연락처가 불분명하므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발인의 배우자인 신청인의 주민전산망을 열람하여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배우자의 정확한 전화번호를 문의
- ④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수집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

✓ 위원회 결정

- 피신청인은 피고발인의 정확한 연락처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발인과 별개의 독립적 정보주체인 신청인의 주민전산망 자료를 열람하였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하나,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필요한 조치 마련토록 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제1조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제2조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률(개정)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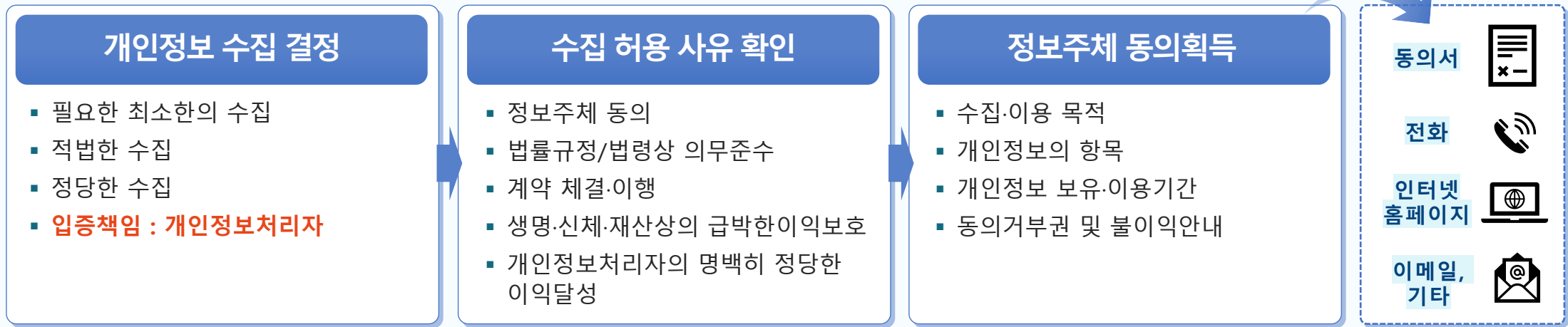
[개인정보 보호법 - 본문 10장 114개 조문, 부칙]

항목	세부 내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정의, 개인정보보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및 실태점검, 자율규제촉진 등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제28조의 2~제28조의 7) ▪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기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한 등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영향평가, 유출통지제도 등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요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권리행사방법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 동의 등/유출 등의 통지·신고/보호조치/ 파기/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분쟁조정의 신청방법·절차, 효력, 집단분쟁조정제도 등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소송 대상,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
제9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소송 대상,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 등 적용제외, 금지행위, 침해사실신고, 시정조치 등
제10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칙, 몰수 추징, 과태료 및 양벌 규정 등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정보주체의 동의



✓ 별도 (구분)동의

- 홍보/판매 권유 동의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제외)
- 14세미만아동 동의획득 (법정대리인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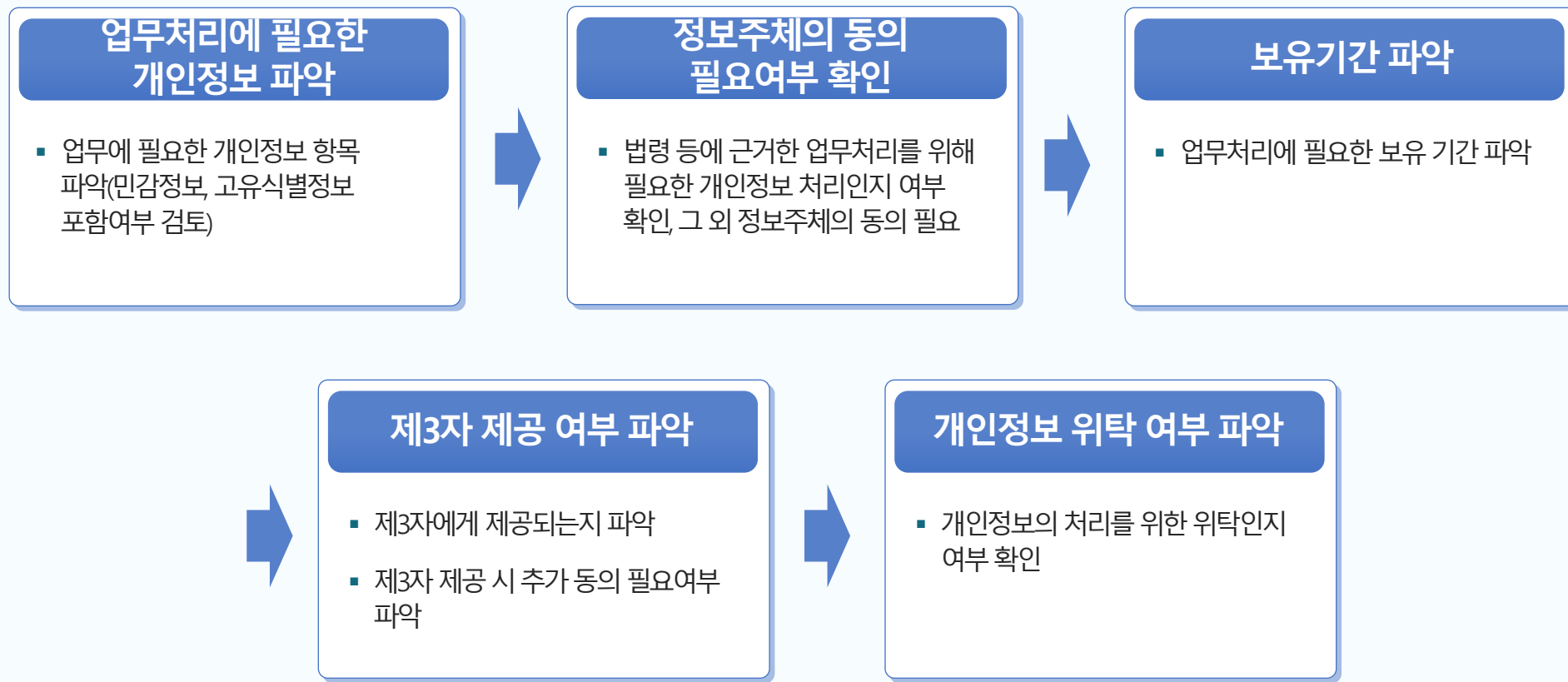
✓ 정보주체의 동의 후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수집 양식 작성(준비단계)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수집 양식 작성(작성단계)

1 개인정보 수집 양식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항목별 양식 작성
-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구분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작성

- 동의 안내 4가지 사항 기재
- 수집목적, 보유기간 명확히 기재

3 별도 동의서 작성

- 마케팅 목적 처리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 권유 등) 동의
- 개인정보 제공을 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동의
-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
- 민감정보처리 동의 (민감정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정보, 범죄정보)
- 고유식별정보 동의(주민등록번호 제외)

4 동의없이 수집이용 시 개인정보 내역 고지 작성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관련법률, 시행령 등 기재 후 고지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구분	세부 내용	처벌규정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헌법기관규칙에 의해서만 처리 가능함에 유의, 법 제24조의 2) ✓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이익 보호(사전동의 받기 곤란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명백히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금지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법령 서식에 관한 개인정보 최소처리 기준

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서식을 제·개정할 때 개인정보가 최소한으로 수집·이용 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임

서식에 적용할 기준

-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처리근거를 둔 경우 수집 가능
- 신청인 기본인적사항 기재란과 신청내용 기재란은 분리
- 인가·허가 등의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첨부서류의 최소화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중요내용의 표시 방법

✓ 정보주체에게 홈페이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때

- 글자 크기는 최소 3mm이상의 크기로 하되 중요내용은 20%이상 크게 표시
- 화면배경과 글자색은 이용자가 읽기 쉽도록 조합하여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파란 색과 굵은 글씨를 사용하여 표시
- 중요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로 요약하여 제시

✓ 정보주체에게 종이문서를 통하여 동의를 받을 때

- 글자 크기는 최소 9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작성하되 중요내용은 20%이상 크게 표시
- 줄간격은 되도록 130%이상 설정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와 밑줄을 사용
- 중요내용이 많은 경우 별도로 요약하여 제시

✓ 작성 예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홍보문자 발송	1년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구분	세부 내용	처벌규정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법 제23조, 제24조) ✓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생체인식정보, 인종민족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div style="border: 2px dashed orange; padding: 10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정 2016.3.29., 2017.7.26.>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③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기 보유 주민등록번호 중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파기 </div>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민감정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서 개인의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시청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9. 8. 8. 19진정0415900)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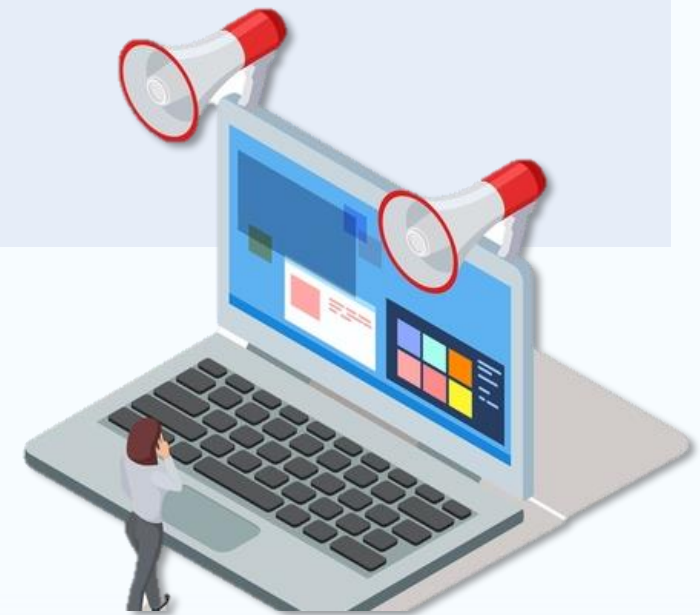
🔒 정보주체의 인지권 보장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내역을 고지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함

✓ 작성 예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개인정보 처리 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의료 지원	주민등록번호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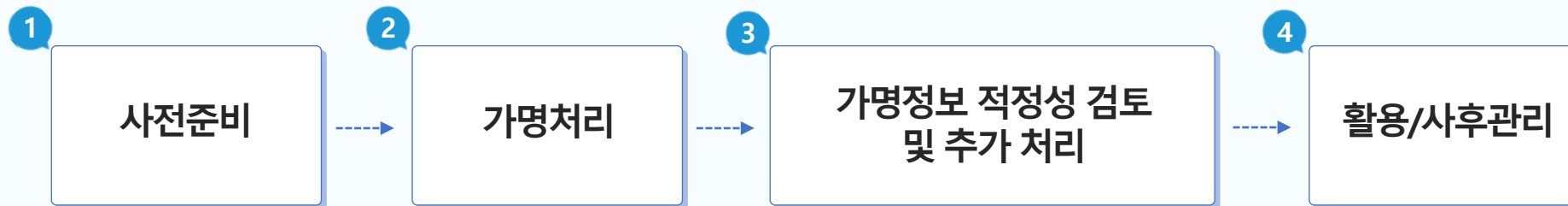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법정대리인의 동의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수집 가능
 - ※ 법정대리인 : 친권자(부모) 및 후견인(①지정후견인→②법정후견인 :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순→③선정후견인)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 보호시설의 장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획득 방법(예시)]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분쟁 조정 사례 3

[14세 미만자 동의 미준수 등]

✓ 사건 개요

-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미파기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① 신청인(만3세)의 모친은 피신청인(모바일 게임 제공자)이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게임 내 아이템을 구매해 왔던 바, 2019. 7. XX 최근 결제된 아이템 구매 건은 신청인(만3세)이 스마트폰을 잘못 눌러 구매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 상담을 이용하도록 안내 받아 전화상담을 진행함
- ② 이 과정에서 상담원이 신청인 모친에게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문의하자 대답해 주었고, 같은 해 8월경 신청인 모친은 피신청인이 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동의와 법적고지사항의 고지 없이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고 즉시 파기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검토를 마친 서류는 파기되지만 본 건 개인정보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이므로 파기하지 않고 3년 동안 보관한다고 안내하였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고 미파기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위원회 결정

-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담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즉시 삭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해당 사안은 기각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홍보·마케팅 구분 동의

[마케팅 광고에 대한 동의방법]

✓ 구분 동의

- 상품의 판매권유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는 정보주체에게 판매권유 또는 홍보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다른 동의와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알린 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재화, 서비스 등의 제공 거부 금지

- ① 정보주체가 선택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제2항), 직접마케팅에 대한 동의(제3항), 목적 외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제18조제2항 제1호)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함
- ②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본질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제16조제2항)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상담 사례

[판매권유 또는 홍보 구분 동의]

✓ 상담사항

- 렌탈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하려고 보니 계약서에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 등에 대해서 구분 없이 한꺼번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법한 처리인가요?

✓ 상담사례집 답변

- 이용약관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받아야 합니다.
- 이 사례에서 렌탈 계약서 작성 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보주체의 선택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는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 마케팅 활용 동의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받아야 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구분		세부 내용	처벌규정
수집 목적과 동일한 범위 내 처리 (요건 충족 시 처리 목적 확대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헌법기관규칙에 의해서만 처리 가능함에 유의, 법 제24조의 2) ②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u>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u> ⑤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이익 보호(사전동의 받기 곤란한 경우) ⑥ <u>개인정보처리자의 명백히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u>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제공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 주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가 적용 가능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수집이용은 폭넓게 인정하되,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 기준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차등화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구분		세부 내용	처벌규정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 처리	목적 외 이용·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③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만 해당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불가능한 경우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⑥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법 제1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3자 제공 가능

※ 제공 : 저장매체, 출력물,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제3자와의 공유 등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7조제1항 참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 출처 등의 고지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하면 됨
-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① 수집 출처, ② 처리 목적, ③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알려야 함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를 관리하고 있어야 함

대량의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

- ①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더라도 ① 수집 출처, ② 처리 목적, ③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을(시기 및 방법을 포함)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처리 범위 확대 - 목적 중심적 해석에서 목적 합치적 해석으로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처리 범위 확대 - 목적 합치적 처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재 결정례

[개인정보 제공요청 vs. 제3자 제공 행위]

✓ 사건 개요

- ① 피청구인 B경찰서장이 2013. 12. 18. 및 2013. 12. 20. 피청구인 A공단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②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 (1981. 4. 13. 법률 제3427호로 전부개정되고, 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의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④ A공단이 2013. 12. 20. B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⑤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 판시사항

- 피청구인 A공단이 2013. 12. 20. 피청구인 B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재 결정례

[개인정보 제공요청 vs. 제3자 제공 행위]

✓ 판단 근거

-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전제 하에 예외적으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취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와 범죄수사의 신속성·효율성 확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①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보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됨
- 그리고 이와 같이 수사상의 이익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형량함에 있어서는 ② 수사 목적의 중대성, 수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정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나 제3자가 침해받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침해받는 정도, 수사 내용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와의 관련성 등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재 결정례

[개인정보 제공요청 vs. 제3자 제공 행위]

✓ 판단 근거 - 민감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요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및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에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경찰관이 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규정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위 시행령 규정들은 '처리'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범죄 수사 등을 위한 민감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 제공 등의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 모두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범죄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각 처리 방식의 고유한 요건을 구비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됨
- 결국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위 시행령 규정들에 따라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를 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경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재 결정례

[정보 목적 외 제3자 제공행위 적법성 판단요건]

✓ 판단 근거 -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 A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함(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참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처리주체의 변경과 당초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 스스로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함. 특히 개인의 인격 및 사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함**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감정보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현재의 결정례에서 제시한 목적 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

✓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전제

- 원칙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금지
- 예외 : 예외적으로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제공 허용 (공공기관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 제18조 제2항 제1~9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정보 제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사상의 이익보다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큰 경우**

수사상의 이익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형량 시 고려사항

- 수사 목적의 중대성, 수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 정도,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나 제3자가 침해받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침해받는 정도, 수사 내용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와의 관련성 등 관련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유형별 부적정 열람 예시

유형	유형별 예시
호기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직원(전/현직)의 고용정보, 산재처리내역 열람 ▪ 대학동기의 급여가 궁금하여 고용정보 열람 ▪ 인턴직원 등 기간제직원이 입사 희망하는 기업의 급여 확인을 위한 고용정보 열람
제3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직원의 요청에 의해 타인의 개인정보 열람 ▪ 구직중인 사촌동생이 ○○기업의 급여를 문의하여 보수총액 열람 ▪ 민원서류 결재완료 전 지인의 부탁으로 장해등급 등 개인정보 열람
사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로 채무자의 주소지 열람 ▪ 부동산 취득을 위해 경·공매 재산내역 열람
내부 행정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사서무가 신규 전입자의 생일 확인을 위해 고용정보 열람 ▪ 연말정산 서류 작성을 위해 노동보험(고용정보) 열람 등
유사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계질병 취소사례를 분석하면서 간암 승인상병자 열람 ▪ 시설장의 근로자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소속 기관장 고용정보 열람 ▪ 타 기관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 차 공단 노동조합 전임자 고용정보 열람
과도한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청구서 처리 시 재해자 외 청구인(신청인) 산재처리내역 열람 ▪ 가입서비스요원 퇴사처리 확인을 위해 고용정보검색 화면에서 공단 관리번호 입력 후 전체 조회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수정된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를 위해 제3자의 개인정보 열람
교육용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직원(상담사) 교육을 위해 제3자의 개인정보 열람
사전동의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열람하는 경우 등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징계

✓ 가중 처벌 기준

- 목적 외 이용에 따른 해당 징계에서 비위사항이 추가될 때마다 한 단계 상향 조정하여 가중 처벌

비위정도 개인정보 구분	비위사항이 1개인 경우	비위사항이 2개인 경우	비위사항이 3개인 경우
민감정보	강등	해임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감봉	정직	강등
일반개인정보	견책	감봉	정직

✓ 가중 처벌 기준

비위정도 개인정보 구분	목적외 이용한 경우		목적외 이용 비위사항 1개		목적외 이용 비위사항 2개		목적외 이용 비위사항 3개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불인정	인정	
민감정보	정직	감봉	강등	정직	해임	강등	파면
중요·고유식별정보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강등
일반개인정보	경고	주의	견책	경고	감봉	견책	정직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와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간의 조화 도모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여부 판단

- 목적의 정당성:구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검토
- 수단의 적정성:해당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공익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 피해의 최소성: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인지 검토
- 법익의 균형성:목적외 이용 또는 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자의 적격여부 확인

- 요청기관(또는 목적 외 이용자)이 개별법에 자료요청(이용)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제공(또는 목적 외 이용) 가능
- 요청기관(또는 목적 외 이용자)이 개별법에 자료 요청(이용) 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여부 확인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와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간의 조화 도모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 개인정보 항목 판단

- 직접 수집·생산한 정보가 아닌 경우 자료 이용 또는 제공 불가
(단, 정보주체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
-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방법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결재에 의한 문서로 회신
- 개인정보 제공 시 암호화하여 제공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필수항목]

- ✓ 목적 외 이용·제공 기준(법적 근거, 별도 동의 등)
- ✓ 목적 외 이용·제공 업무절차(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등)
- ✓ 목적 외 이용·제공 방법(통신방식, 보조저장매체 등)
- ✓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
- ✓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문서화 요청 등)
- ✓ 관리대장 기록관리 방안 및 사실의 공개(관보, 홈페이지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제공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목적 외 제공 FAQ

❓ 공공기관인데 감사부서나 상급기관에서 감사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데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제1항

-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함)
 -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보유단계에서의 업무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용 또는 제공하고, 내부직원(수탁자 포함)이 권한을 넘어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

보유 단계에서의 확인사항

- 법령상 요청근거가 있는가
- 보유 목적외 이용 및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포함되는가
- 요청한 법적근거와 이용목적이 타당한가
- 제공을 요청한 목적에 적절한 개인정보항목인가
-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이익과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예상피해를
- 비교하여 전자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가
- 적절한 보안대책 등 처리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루어졌는가



유의사항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해야 함
- 정보주체와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공을 제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보유단계에서의 업무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용 또는 제공하고, 내부직원(수탁자 포함)이 권한을 넘어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 ”

문서에 의한 이용 및 제공요청

- 목적외 이용을 할 때는 이용(목적 외 제공 포함) 목적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범위가 명시된 문서를 통해서 요청 받은 경우만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여, 그 처리 절차의 적정성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함



목적외 이용/제공 요청 문서 필수 기재사항

- 이용 및 제공받고자 하는 목적
- 이용 및 제공받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 적법 근거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사례

위수탁	수탁자
고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하려는 (가)기업	(가)기업과 계약을 맺고 고객 리스트를 제공받은 A컨설팅 회사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나)공공기업	(나)공공기관의 사이트 관리를 수행하는 B업체
인사 관련 문서를 파기하려는 (다)기업	(다)기업의 인사 문서를 파기하기 위해 고용된 C파쇄업체
기업 공식 SNS의 활성화를 위해 D마케팅 업체와 계약한 (라)기업	(라)기업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고객의 성향을 고려한 친구 맺기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는 D마케팅 업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자동 출금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관리를 하는 (마)대학	(마)대학으로부터 기부자의 정보를 받아 자동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E공공기관
등록금을 은행을 통해 대리 수납하는 (바)대학	(바)대학으로 부터 재학생 정보를 받아 등록금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는 F은행
회사 내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리조트와 계약은 맺은 (사)기업	(사)기업으로 부터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받아 객실 예약을 하는 G리조트
전국에 약 천 여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배달음식을 파는 (아)본사	(아)본사의 콜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배달주문을 처리하는 H가맹점
도서 대출 반납 기기를 설치·운영 중인 (자)시립도서관	도서관 대출반납 처리기기를 유지보수 하는 I업체
파본도서를 교환해 주려는 (차)서점	(차)서점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받아 도서를 새로 배송하는 J출판사
역내 보안 CCTV 관제센터를 설립·운영 중인 (카)구	(카)구의 보안 CCTV관제센터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K보안업체
채권추심업무를 외부로 위탁하려는 (타)기업	(타)기업으로부터 채무자 정보를 받아 추심업무를 하는 L채권회수 전문기관
회사에서 직원교육을 위해 교육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은 (파)기업	(파)기업으로부터 직원의 이름, 사번, 휴대폰 번호를 받아 교육을 수행하는 M교육업체
공공기관 간 협약을 통해 업무 일부를 N공공기관에 위탁하는 (하)공공기관	협약에 따라 (하)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송 받아 처리하는 N공공기관

(출처: 개인정보처리 위수탁안내서 8면)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조치사항



✓ 위탁할 업무 범위 구분

- 위탁자는 자신의 업무 중 위탁하여 수행할 업무를 선정하기 전,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여 업무 위탁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 위험 요인

- 상세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수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시 피해가 큼
 - 주소 중 '도/시'보다 '도/시/도로명/상세 주소'의 경우 피가 큼
-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수탁하는 경우 유출 및 오남용 시 피해가 큼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시 피해가 큼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위탁사실 홈페이지 등 공개

[위탁사실 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 – 공개의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업무 위탁 시 조치) 제2항 내지 제3항

- **원칙** :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 게재
- **예외**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
 - 위탁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 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위탁자 관리감독 의무

[수탁자 교육 및 감독 의무]

✓ 감독의 범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의해서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감독의 범위는 법 제26조 제7항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와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해 위·수탁 문서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 여부임. 즉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적절한지 여부 등 개인정보 위험 요인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감독의 방법

- 위탁자가 수탁자를 감독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 현장 방문, 점검 도구 배포 등 합리적인 수단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기적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교육 수행

- 원칙 : 위탁자가 직접 수행
- 예외 : 수탁자가 증빙할 수 있다면 수탁자 자체 교육 수행 가능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 ①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②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③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 ④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⑥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의무의 예외

-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출입국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념

-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기관의 처리방침에 대한 사항

✓ 개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 등

[처리방침에 표시할 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포함)
-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제3항과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할 때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의 파기

구분	세부 내용	처벌규정
개인정보 파기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법 제21조, 표준지침 제55조)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분쟁처리 관련 기록(3년), 요금정산(5년), 계약 및 청약철회(5년) : 전자상거래법 ✓ 파기 방법 :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적 파일형태 :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포맷이나 삭제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파기 - 기록물, 인쇄물, 서면 : 파쇄 및 소각 ✓ 법에 보유 근거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2년 이내 보유 및 파기(~'16. 8. 6)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공기관의 경우, 파기 전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여부 검토 필요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사례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상담내역에 대한 삭제 등 요구]

✓ 사건 개요

- ① 신청인(해당 기관 민원 제기한 자)은 피신청인(△△공공기관)에게 39차례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민원접수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전자우편주소휴대전화번호 민원처리 과정에서 상담내역 등을 수집함
-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내역 삭제를 요구함
-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보유기간을 규정한 관련 법령 때문에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내역을 삭제하고 상담내역 보유기간을 규정한 관련 법률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결정

- 신청인은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피신청인에게 그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피신청인은 행정사무의 효율적 수행 및 사실증명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삭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공공기록물법 제1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으로서 그 상담내역을 3년의 기간 동안 보유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을 기각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구분	세부 내용	처벌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운영(법 제25조제1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② 범죄예방 및 수사 ③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④ 교통단속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녹음기능 사용 금지(법 제25조제5항) <p>※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표준지침에서 정한바에 따름</p>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내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법 제25조제4항, 영 제24조) ✓ 안내판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설치목적 및 장소 ② 촬영범위 및 시간 ③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A구청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절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19.7.22.)]

✓ 질의내용

- A구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 받은 경우, 정보주체 이외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주문

- A구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때 개인영상 정보에서 보호 조치된 제3자를 정보주체가 식별할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열람을 거절할 수 없음

✓ 판단이유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는 개인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점(「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6.12. 참조), 개인영상정보에 포함된 제3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주체 외의 자는 제3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제3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제3자는 손해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가 보호조치된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특수한 주관적 사정을 이유로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라 판단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정신의료기관 병실 및 화장실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 병동 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환자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CCTV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함(2019. 2. 25., 18진정0449000·18진정0354001·18진정0591901 병합)

✓ 방범용 CCTV 목적 외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 A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시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의 활용은 다른 대안을 모두 소진한 다음 예외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그치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2019. 1. 16., 17진정0903600)

✓ 교도소 작업장내 샤워실 CCTV 촬영

- B교도소장에게, 위탁 5작업장 내 탈의공간에 설치된 CCTV에 수용자의 알몸 상태가 촬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2019. 11. 28., 19진정0616200)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가명정보

✓ 가명정보 개념 명시 (제2조제1호 개정)

- 가명정보는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 가명처리**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 과학적연구 :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

✓ 단, 개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예) 홍길동, 32살, 남성,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010-1234-5678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
예) 홍xx, 32살, 남성, 서울시,
마포구, 010-xxxx-xxxx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가명정보 적용 제외 조문

- ✓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개인정보처리자 적용 제외 조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적용 제외 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처리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전문기관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간 정보집합물의 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함

- 결합전문기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야 함(필요한 지원업무 : 한국인터넷진흥원 수행)
- 결합신청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 분석 가능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가명정보 안전조치 의무 신설

✓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신설

- 가명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필요(법 제28조의 4)
 - ➡ 추가정보의 분리 및 보관, 가명정보 처리 내용의 기록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방법 마련

✓ 안전조치 의무

-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분리
- 가명정보 도는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 및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내부 관리계획수립·시행

✓ 법 제28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
|------------------|--|
| ①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 ④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
| ②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 ⑤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③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 |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가명정보의 전문기관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전문기관

- 결합전문기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야 함
-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결합전문기관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원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등

- 결합신청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이하 "분석공간"이라 한다)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음(안 제29조의2 신설)

※ 위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가명정보 결합 반출

✓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 기업 간 데이터를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 후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법 제28조의 3)
 - ▶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마련

✓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3년

✓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 1, 2의 경우 반드시 취소, 3~5는 해당 시 취소 가능

③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결합 및 분석 등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⑤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가명정보 결합·분석·반출

가명정보의 결합

-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기관은 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은 보호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합
-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결합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가능

결합된 정보의 분석

- 결합 신청자는 전문기관 내 설치된 안전한 공간에서 결합된 정보 분석 가능

결합된 정보의 반출

- 분석공간에서 결합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분석 공간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신청기관이 전문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를 거친 후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

(출처: 행정안전부, 데이터3법 시행령 토론회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주요내용, 5면)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 개인정보 사례

[개인정보 확인 시 보호조치 미흡]

✓ 상담사항

○○마라톤 대회 홈페이지에서 참가 관련 물품 배송조회를 확인하는 경우 이름만 입력하면 집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의 경우 동명이인은 없어 제 것만 확인되지만 같이 참가하는 동료의 이름으로 검색하니 동명이인 4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처리인가요?

✓ 상담사례집 답변

- 참여자의 경기 물품 배송 조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절차나 조회되는 개인정보 일부의 마스킹 처리 등을 통해 타인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사례의 경우 참가자 중 동명이인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타인의 성명으로 물품 배송조회를 한다면 타인의 집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 가능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항목을 조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일부 마스킹 처리하여 보여 주거나
- 별도의 인증절차(예로, 배송 조회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 설정 등)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 개인정보보호조치(안전조치 의무)

✓ 점검사항

내부관리계획 수립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내부 관리 지침 수립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 주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입출력 또는 저장된 개인정보와 저장매체 관리 및 보호
- 접근권한 부여 및 접근 사실 자동기록
- 개인정보 접근 인원 최소화
-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바이오정보 등의 암호화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물리적 접근방지

✓ 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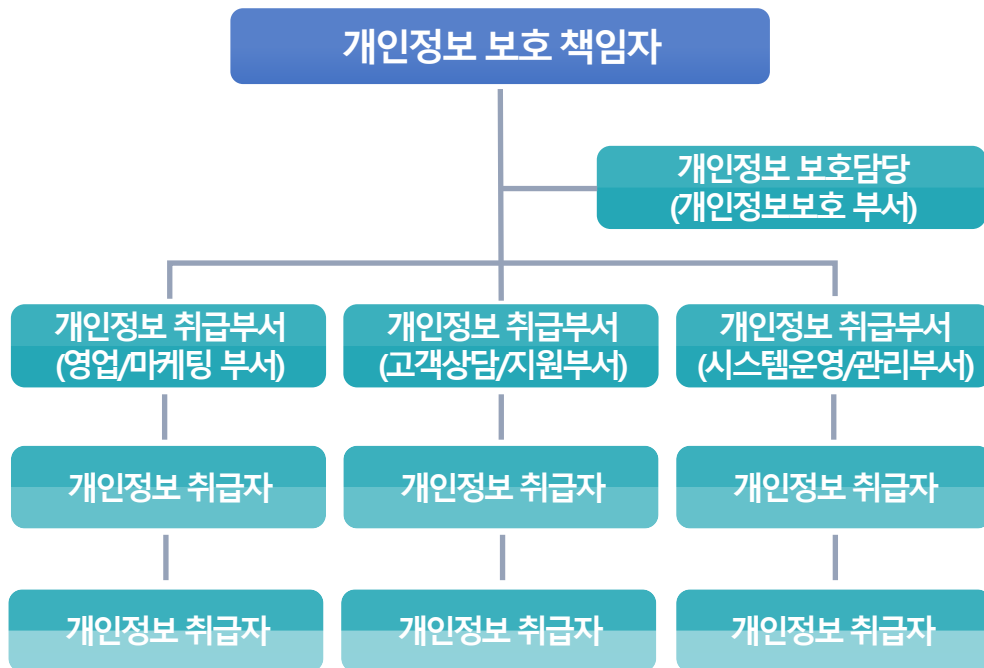
- 공공기관 : 의무
- 민간 : 적극적 권고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 개인정보처리자 기준 관리체계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도 예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 개인정보 취급부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CPO vs. DPO

GDPR	개인정보 보호법	비고
<p>[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주체를 의미함 컨트롤러는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규정하기만 하면 족하며, 자신이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프로세서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음 	<p>[제31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p>[시행령 제32조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법 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은 공무원 또는 사업주, 대표자, 임원 등 일정 지위로 구분함 GDPR은 전문적 자질,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과 실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제39조에 언급된 직무를 환수할 능력에 근거하여 지정되어야 하며, 독립된 지위가 보장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 내부 관리계획수립

-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유형1]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③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⑤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 ⑥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 ⑦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⑧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유형2]

12~14까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음

- ⑨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⑩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⑪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⑫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⑬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⑮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유형3]

1~15까지를 포함하여야 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내부 관리계획수립

- ✓ 1~15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이력을 관리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내부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 의무

-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 내부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실효성 보장 위한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 “○○년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점검 계획(안)” 등과 같은 형태로 수립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 점검 항목 및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이행 점검은 사내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서(감사팀 등), 관련 부서(개인정보보호팀) 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업체 수행 가능
- 이행 점검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적절하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최소 연 1회 권고) 점검 의무
- 이행 점검 결과는 “○○년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점검 결과” 등과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점검결과 및 개선조치 보고

이행 점검 (예시)

- ☞ 점검 대상 및 시기
- ☞ 점검 조직 및 인력
- ☞ 점검 항목 및 내용
- ☞ 점검 방법 및 절차
- ☞ 점검 결과 기록 및 보관
- ☞ 점검 결과 후속조치(개선, 보고) 등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 접속기록 관리(개정)

-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관리**
 - **아래의 정보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환경에 따라 **책임추적성 확보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기록**해야 함

계정	접속일시	접속자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수행업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정보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 (년-월-일, 시:분:초)	접속한 자의 PC,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접속 주소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이름, ID 등	회원목록 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의무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접속기록 항목(예시)

- ✓ 기록하는 정보주체 정보의 경우 민감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접속기록 항목 예시

- 계정 : A0001(개인정보취급자 계정)
- 접속일시 : 2019-02-25, 17:00:00
- 접속지 정보 : 김길동PC 또는 192.168.100.1(접속한 자의 단말기 정보 또는 IP주소)
- 정보주체 정보 : 홍길동(정보주체를 특정하여 처리한 경우 정보주체의 식별정보)
- 수행업무 : 회원목록 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위 정보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환경에 따라 책임 추적성 확보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기록해야 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 접속기록 정기 점검(개정)

-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접속기록 내 비정상 행위 예시

- 계정 : 접근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계정으로 접속한 행위 등
- 접속일시 :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후,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에 접속한 행위 등
- 접속지 정보 :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 또는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특정 정보주체에 대하여 과도하게 조회, 다운로드 등의 행위 등
- 수행업무 :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의 행위 등
- 그 밖의 짧은 시간에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 개인정보 사례

[임시 개인정보취급자의 사용자 계정 관리]

✓ 상담사항

저는 공공기관에서 임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담당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제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상담사례집 답변

-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고, 업무 담당 직원의 사용자 계정을 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 사례의 경우 한시적으로 개인정보 입력 및 정리 업무를 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여야 하고 업무 담당 직원의 사용자 계정을 공유하여서는 안 됩니다.
- 그리고 해당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인 개인정보 입력 등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법 적용의 일부 제외(제58조) 및 금지행위(제59조)

제58조(규정 적용 제외 대상) 제3장~제7장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준수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해야 함

제59조(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의무대상자]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소속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적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파견직, 수탁자 등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법 적용의 일부 제외(제58조)에 따른 적용 조문

항목	세부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9조(기본계획) 제10조(시행계획)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제14조(국제협력)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법 개정으로 추가됨(제58조가 개정되지 않아 법 해석상 추가됨)	
제9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59조(금지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64조(시정조치 등)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6조(결과의 공표) 제67조(연차보고)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양벌규정)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5조(과태료)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 적용의 일부 제외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질의내용

- A시가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한 본 건 영상정보를 군·경 합동상황실 이외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전체에서 이용하고 검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A시가 통합방위 지원본부에서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의결주문

- A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보령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관제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수집한 영상정보를 이용하고 검색할 수 있으며,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조작할 수 있음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 적용의 일부 제외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CCTV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건]

✓ 판단이유

- A시는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의 분석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이때 이용되는 본 건 영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해석됨
- 따라서 A시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작전 지원을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고 검색할 수 있으며, 본 건 영상정보처리기를 조작할 수 있음. 이 경우 A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사례로 살펴보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주요원칙

항목	세부내용
처리목적의 명확화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당시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최소 수집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적법한 수집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목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성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공개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주체 권리 존중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청구권, 정정·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익명/가명처리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이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